

경찰투입 남발...노사갈등 증폭시켜

9.7.18

‘광역’이후 노동탄압 ③

광역선거 이후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한 경찰투입과 개입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국이 물리력을 앞세워 노동쟁의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경찰이 노사협상장에까지 난입해 노조 교섭대표들을 무더기 연행, 구속시키는 등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9월 이후 ‘노동탄압’을 예고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풀이하고 있다.

최근 무절제한 경찰의 노동현장 개입은 17일 현재 울들어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과 관련해 40여명이 구속되고 8백41명이 연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 25명, 연행 4백40명의 2배 가까이 들어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일 노동부 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의 중재로 노사협상을 갖던 인천시 북구 효성동 동서식품에 부평경찰서 사복형사 3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영장없이 노동자 교섭대표 7명을 그자리에서 모두 강제연행해 노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3일 ‘유령노조’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인천시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대책회의를 갖고 이 회사 노조가 유령노조라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높이의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게 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태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자 경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사협상 현장에까지 들어가 교섭대표를 강제연행하는 ‘악수’를 두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14일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노조원 6명이 38m 높이의 취수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지난 5월13일부터 노조원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삼양금속에 경찰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회사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지난달 22일 안기부와 기무사·노동부 관계자, 시장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림에 따라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미 예상되기도 했으며, 경찰 투입이 경찰 자체 판단이 아닌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노동운동 탄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교섭현장까지 무차별 개입 일쑤 협상 설 땅 잃어...대량구속등 악순환

농성노동자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쟁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아예 회사 안에 경찰 전용 경비전화를 가설, 회사쪽과 노동자들의 동향 등에 관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 6월23일 1천여명의 병력을 기습적으로 투입해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려 했으나 오히려 노동자들이 27m

1천여명을 투입, 고공농성자를 제외한 노조원 37명을 강제연행했다.

이 회사 노조는 경찰력 투입이틀 전인 지난 12일까지도 회사쪽과 단체교섭 41차례, 임금협상 22차례 등 협상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에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회사쪽으로부터 3차례의 공권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구실로 앞뒤 가리지 않고 경찰력을 투입, 노사갈등만 심화시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주)기아자동차의 경우 노조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노조집행부의 일방적인 임금협상 합의에 반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경찰은 노사 또는 노노간 충돌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회사 주변에 병력을 배치,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회사쪽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아 노조원들의 검거에 나섬으로써 노조원들로부터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회사쪽 입장을 두둔하고



지난 12일 경찰이 동서식품 노사협상 장소에까지 들이닥쳐 노조 대표를 연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7m 높이의 원료저장용 옥탑에 올라가 한때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이종찬 기자〉

사용자쪽에 국면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동쟁의는 지난 3일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 정상조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노동부와 상공부가 협상 백지화 압력을 행사해 회사쪽의 무효화 선언 발표를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개입과는 별도로 행정부처의 노골적인 간섭과 통제가 사용자쪽의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관계당국이 노동현장에 대해

공권력을 다양하고 무차별적으로 방법으로 행사함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극, 자칫 노동운동이 격렬한 양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인천 노동조합협의회 정찬(31) 교육부장은 “관계당국 각 사업장의 쟁의발생 원인·과정 등을 정확히 분석,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대응해 처벌할 때만이 공권력의 위와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수원=김영환 배경록 기자〉